

미국의 2013년 고용전망

Randall W. Eberts (미국 W.E 업존 고용연구소장)

■ 머리말

현재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경제침체가 끝나고 안정적인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침체가 말엽 수립된 주요 경기진작 패키지와 적극적 통화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미국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7.8%에 머무르면서 2013년을 맞았다. 지난 4년간 실업률은 7.8% 이상이였으며, 이는 1947년 이후 최장기 고실업률에 해당한다. 실업기간은 약간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1,250만 명이 구직 상태에 있으며, 이는 실업률이 5%였던 침체기 직전보다 450만 명이 더 많은 수치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은 모든 인구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전의 침체기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소수집단, 저학력층이 특히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실업률이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2010년 10월 이후, 미국경제는 27개월 연속으로 월평균 153,000개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증가는 생산가능연령(16세 이상)에 진입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실업자 수를 낮추기에는 충분치 않다. 적체되어 있는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경제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례로 노동연령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employment-to-population ratio)이 지속적으로 낮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 동안, 고용률은 62.7%에서 58.5%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침체에 기록된 가장 큰 폭의 하락에 해당한다. 그 이후 2012년 12월에는 58.6%로 소폭 상승했다. 저학력층과 기타 취약계층의 취업은 분명 더욱 어려워졌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고용률은 52.6%, 실업률은 14%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은 더 커서, 16~19세의 취업률은 29.1%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21.6%에 이른다. 흑인 청년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14.9%, 40.5%다.

■ 재정절벽 모면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경제는 연방재정 지출의 가혹한 삭감과 세금 대폭인상 가능성으로 암울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른바 “재정절벽”을 당분간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막판에 이르러 미의회는 합의를 도출해내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에만 국내 군사비 지출로 1,100억 달러를 줄이고 납세자 98%에 대한 세금 인상을 막는 입법안에 서명하였다. 의회예산국(CBO)에 의하면, 의회의 합의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2012년과 2013년 말 사이 연방적자는 6,070억 달러 줄어들었을 것이며 이는 GDP의 약 4%에 해당하는 액수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적자 감소액은 유사한 기간에 추진되었던 경기부양 패키지보다 더 높은 GDP 대비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재정 긴축안은 상당한 경제 둔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의회예산국의 추산에 따르면, 자동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발효되면, 거의 3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13년 4사분기에는 실업률이 현재의 7.8%에서 9.1%로 높아진다고 한다.¹⁾ 또한, 이러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은 연방 재정부양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추진되도록 되어 있었다. 2009년 2월 입법화된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해 2년간 8,400억 달러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경기부양프로그램에 의한 지출은 2011년 9월에 종료되었지만, 이

1)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conomic Effects of Policies Contributing to Fiscal Tightening in 2013”, November 2012.

프로그램으로 인해 2012년에 120만 개, 2013년에는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추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직 회복기반이 취약함을 인식하고, 2011년 9월에 “미국 일자리 법(American Jobs Act)”으로 추가 경기부양패키지를 도입하고자 했다. 4,470억 달러의 예산을 들인 이 법안의 목적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공,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혁신적 프로그램 실시, 중산층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부양 및 실업급여 확대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 상원이 이 법안을 논의나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

의회가 최종적으로 연방예산 적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재정 긴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긴축이냐에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를 되돌아보며, 1938년 당시 의회가 긴축정책을 택하면서 경제가 또 다시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되었던 상황을 떠올린다. 의회가 향후 추가 경기부양패키지를 택할 의향은 없음이 분명하다.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최근 법안은 대규모 연방예산 적자와 지속불가능한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시적 방안일 뿐이었다. 행정부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부채 발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연방 적자 상한선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또 다른 의회 내 공방이 예상된다. 그때에는 의회가 추가 세금 인상보다 지출 삭감에 더 치중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일부 의원들이 세금 인상 문제가 이미 1월 합의에서 처리되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 확장적 연방준비제 정책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일한 경기부양책은 통화 정책이다.²⁾ 9월의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회의가 개최된 후에, 연방준비위원회는 이전과는 다른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방식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준위는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 전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FOMC가 기관모기지담보증권(agency mortgage-

2)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경기부양책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backed securities)을 계속 매입하고 추가 자산매입을 실시하며, 물가안정 차원에서 그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타 적절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연준위의 공식 성명에 의하면, 채권매입 계획은 “장기 금리에 하향 압력을 가하고, 모기지 시장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금융상황이 더욱 유리해지도록 도와준다.” 9월 발표는 ‘3차 양적 완화’ 또는 연준위의 표현에 의하면 ‘QE3’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양적 완화는 연준위가 은행으로부터 채권 또는 기타 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경제에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QE3의 경우, 연준위는 모기지담보증권을 매입한다. 이러한 연준위 조치는 금리를 낮출 뿐 아니라 은행의 대출 자금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대출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연준위가 처음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2008년 11월로, 연준위가 연방기금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낮추면서 연준위의 단기 정부채 매입이라는 기존 정책이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연준위는 9월에 발표된 3차 조치를 포함하여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실시해오고 있다. 약 4년에 걸친 1차 및 2차 시기 동안 연준위는 거의 1조 9,000억 달러를 경제에 투입하였다. 3차에는 매월 400억 달러의 저당담보증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부 장기증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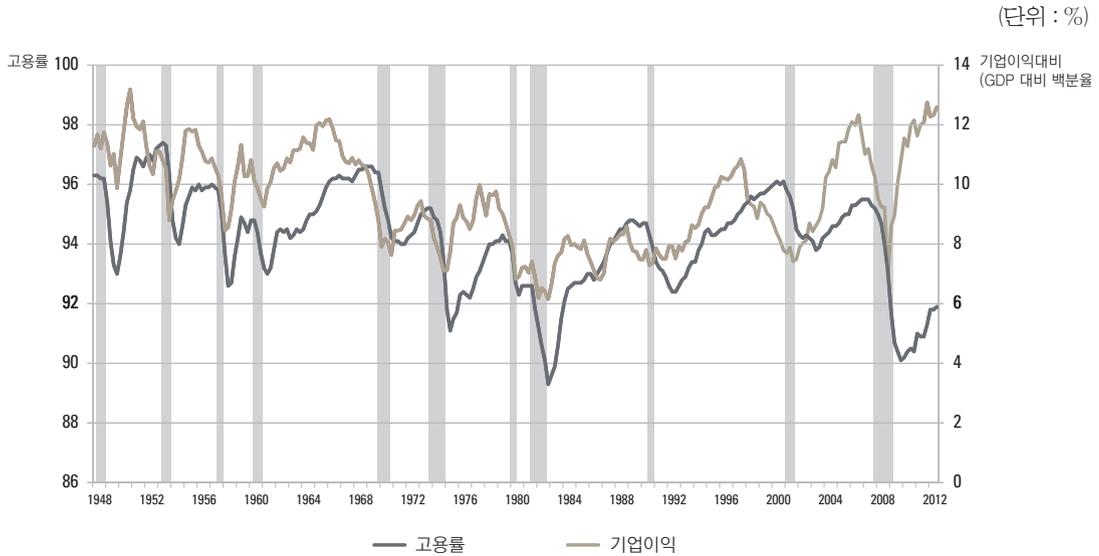
이러한 양적 완화와 연방기금금리 제로유지 유지에 더하여, 연준위는 경제 진작 노력의 일환으로, 장기증권은 매입하고 단기증권은 매각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로 불리는 이러한 장기 수익률 인하 정책은 주택, 차량 구입 및 사업 자금 용자를 원하는 이들의 대출 비용을 줄여준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2008년 금융위기에 맞서 연준위가 추진한 일련의 주요 정책들 중 세 번째 정책에 해당한다. 첫 번째 정책은 단기 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연준위는 성장 촉진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다음으로 취한 조치가 양적 완화였다. 연준위의 두 차례 양적 완화는 각각 ‘QE’와 ‘QE2’로 불린다. 2011년 여름에 QE2가 완료된 직후, 경제는 다시 약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준위는 즉각적으로 QE3를 택하는 대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발표하였고, 이후에 QE3를 실시하였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 회의에서 연준위는 양적 완화 정책의 세부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종료 희망 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신, FOMC는 인플레이율

이 2.5%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실업률이 6.5% 미만으로 감소할 때까지 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아틀랜타의 연방준비은행이 제시한 산출자료에 의하면, 연준위는 향후 얼마간은 양적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월 순고용창출이 지난 27개월 동안 평균치였던 153,000개로 유지된다면, 실업률이 현재의 7.8%에서 목표치인 6.5%로 하락하기까지는 40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경제 자립도가 더 커지고 그와 함께 양적 완화로 월 순고용창출이 180,000개로 늘어난다면, 실업률 6.5%에 도달하는 기간은 24개월로 줄어들 것이다. 월평균 180,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94년과 2001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그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록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로는 월평균 18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적이 별로 없고, 2006년을 포함한 이전 24개월 동안에만 기록되고 있다. 2012년 12월 FOMC 회의에서 발표된 연준위 예측 실업률 자료는 실업률이 6.5%로 낮아지기까지 24~30개월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17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양적 완화는 은행이 초과 현금을 대출해줄 의향이 있을 때만 경기 진작 효과를 가진다. 단기 금리가 경기 진작 도구로 사용되던 전통적인 통화정책과는 달리, 양적 완화는 은행이 대출해주는 초과 현금량을 늘림으로써 통화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은행이 초과 현금을 대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은행이 상환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은행 규정에 의해 대출여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면, 경기 진작 조치로 발생한 초과 현금을 경제에 풀어 놓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을 꺼려하고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은 의무 준비금인 2,5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기 전, 은행 준비금 보유액은 위의 하한선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연준위의 양적 완화로 인해 발생한 현금의 대부분은 여전히 은행 금고에 갇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있다. 초과 현금 전부가 대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연준위의 증권 매입은 금리, 특히 장기 금리를 낮추고, 이로 인해 비록 더 많은 현금이 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게 대출되는 경우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일부 저명 경제학자는 양적 완화가 미국 내 그리고 전세계의 또 다른 침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림 1] 고용률과 기업이익



■ 기록적인 기업이익과 상대적으로 낮은 채용률

대기업들이 기록적으로 높은 이익을 공장 및 설비에 재투자하거나 추가 근로자 고용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이익은 GDP 대비 13%에 육박하여 195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익과 고용은 동반 추세를 보이지만, 최근 경제회복기의 경우 회복이 시작하면서 이익은 바로 급증한 반면, 고용은 부진했고 최근에서야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기업규모별 고용을 살펴보면, 침체기 동안 근로자 1,000명 초과 기업은 최소규모 기업(근로자 20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타 기업 집단보다 낮은 일자리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고용증가율은 근로자 100~500인 기업들에서 나타났다.

■ 지속되는 불확실성

기업들이 추가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경기전망을 하

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의 ‘기업 신뢰지수(Business Confidence Index)’는 2011년에 지난 10년간 최고치인 61을 기록하였지만 현재는 50을 오르내리고 있다. 50을 초과하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확충하고 있다는 뜻이며, 50 미만이면 전반적인 사업 축소를 의미한다. 기업신뢰지수가 가장 최근에 50에 근접했던 시기는 2011년 8월로, 당시 의회가 부채상한선 상향 조정을 꺼리면서 연방정부의 채무불 이행 가능성으로 경제가 술렁거리던 때였다. 그 전에는 2007년 말 경제침체가 시작되면서 지수가 50을 밑돌았다. 확실히 50 전후의 지수는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전히 낮은 소비자신뢰지수도 경기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2013년 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개월 전의 66.7, 2개월 전의 71.3에서 58.6으로 떨어졌다. 침체기 전에 평균 110을 기록하고 2000년 초에는 150에 육박했던 소비자신뢰지수가 1990년대 초반 이후로 관측된 바가 없는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신뢰지수가 경기후행지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소비자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소비자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주택시장은 여전히 많은 가구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많은 가구들이 소유 주택의 가치보다 더 큰 저당 대출을 받은 상태지만,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은행들은 유질 처분된 대량 주택 재고를 통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미 의회가 연방적자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은 세금 인상 및 정부 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의 태도는 2013년 초반부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의회는 확실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 고용전망

2013년 고용전망과 관련하여 합의된 예측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순고용창출은 2015년까지 실업률을 6.5%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 조금 못 미친다. 필라델피아의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39개 예측 전문가들은 2013년에 월평균 143,000개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으며, 이는 2012년의 월평균 155,600개보다 적은 수치다. 월평균 순고용창출은 2013년 4사분기에 이르러 178,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가 2014년까지 유지된다면, 실업률 6.5% 목표는 2015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측기관들은 2015년 실업률을 6.9%로 전망하고 있다. 실업률을 목표치보다 높게 예상한 이유는 고용전망이 개선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추가 실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증가는 GDP 증가에 달려 있다. 2013년 월평균 순고용창출을 143,000개로 예측한 근거는 2%의 GDP 예측성장률이다. 현재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2.3%의 속도로 서서히 성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달성 가능한 수치다. 3사분기의 성장세는 이보다 훨씬 더 커서 연간 기준 전분기대비 증가율이 3.1%를 기록했다. 그러나 4사분기 GDP 수치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분기보다 0.1%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4사분기 성장에 관한 세 차례의 추산 중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후 추산을 통해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하락의 주된 원인은 연방지출의 대규모 삭감과 재고 감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 창출

그렇다 해도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은 지난 몇 차례의 경기순환을 거치면서 위축되어 왔다. 한 경기순환기 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 대비 연평균 가구고용 증가율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로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다. 즉 2000년대의 10년 동안 이전 10년과 비교하여 실질 GDP 성장률이 1%p 늘어나더라도 고용성장률은 오히려 더 낮았다. 2001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고용은 연평균 0.9%로 증가한 반면에 연평균 GDP 성장률은 2.6%로, 두 수치 간 비율은 0.34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1973년 11월부터 1980년 1월까지의 경기순환기 동안, 총고용은 연평균 3.4%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GDP 성장률은 4.5%로, 0.75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 감소는 총고용창출률(rate of gross job creation) 추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총고용증가분(gross job gains)은 기존 기업의 확충과 기업 신설로 인해 창출된 실제 일자리 수를 가리킨다. 매월 2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매월 거의 그만큼의 일자리가 기존 기업의 폐업 및 축소로 인해 사라진다. 이러한 두 총일자리흐름(gross job flows)의

차이가 순고용변화(gross employment change)다. 총고용 대비 총고용증가율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1990년대에 8%에서 최근 침체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는 6%로 떨어졌다가 회복기에는 6.5%로 상승하였다.³⁾

■ 숙련 불일치

일자리 창출이 감소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숙련 불일치(skill mismatch)에 있다. 원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이 현재 미충원된 일자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⁴⁾ 적합한 근로자를 찾지 못한 응답자의 비중은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에 가깝다. ManpowerGroup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숙련 부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약 10%는 자신들이 제시한 임금수준으로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수락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15%는 채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숙련 부족이 아니라 해당 특정 업무와 관련된 경력 부족에 있다고 답했다.⁵⁾ 숙련 격차의 존재와 관련하여 더욱 혼란스러운 점은, 심지어 사용자들이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직무에 있어서도 지난 몇 년간 임금이 증가하지 않고 사실상 감소하였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불일치의 존재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탐구는 이제서야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실업 불일치가 침체기 동안 실업률 증가분인 5.4%p 중 3분의 1의 이유라고 결론지었다.⁶⁾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3)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민간부문에 대해서만 일자리 증가분 및 감소분 통계를 집계하는 반면, 순고용창출 자료에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모두 포함된다.

4) NFIB Small Business Economic Trends, Monthly Report, January 2013.

5)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Macroblog: “The Skills Gap: Still Trying to Separate Myth from Fact,” June 2012.

로 부족한 부문 및 업종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채용이 감소하였고 결국 실업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침체기 동안 소멸된 750만 개 일자리 중 절반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불일치가 경제에 미친 과급효과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실직 근로자들은 보건서비스와 같이 경기침체의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부문의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었을 가능성은 적다. 경기침체에서 주택 버블의 역할을 감안할 때 다소 놀라운 일이지만, 이 연구에서 지리적 불일치의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불일치가 실업률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고등학교 중퇴자보다 대학 졸업자가 거의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구인직과 기존 인력 간 교육 격차를 측정한 결과, 교육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이 실업률은 더 높고 고용창출률은 더 낮았다.⁷⁾ 이 연구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관성은 불일치의 효과에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일치와 기타 구조적 문제들이 실업률 증가에 기여한 유일한 요소들은 아니다. Rothstein은 현재 경기순환기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모두의 증거에 비중을 두고, 구조적인 공급측면 요소들은 원인의 일부일 뿐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였다.⁸⁾ Rothstein은 숙련 불일치보다 노동수요 부족이 현재 노동시장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결정요소라고 결론지었다.

■ 맺음말

미국경제는 2012년에 지속적인 고용증가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도 그러한 향상이 계속될

6) Aysegul Sahin, Joseph Song, Giorgio Topa, and Giovanni L. Violante(2012), "Mismatch Unemployment,"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7) Jonathan Rothwell(2012), "Education, Job Openings, and Unemployment in Metropolitan America," Metropolitan Policy Program at Brookings, Brookings Institution.

8) Jesse Rothstein(2012), "The Labor Market Four Years into the Crisis: Assessing Structural Explanations," NBER Working Paper 17966.

것으로 모두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완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2013년 초반에 이른바 '재정 절벽'을 피하면서 가혹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우려는 해소되었지만, 미 의회는 아직까지 대규모 재정 적자와 지속 불가능한 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침체기 이전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위는 전례 없는 많은 액수의 초과 현금을 은행에 제공함으로써 경기부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 초과 현금의 상당 부분을 금고에 묶어두고 대출로 유통시키기를 꺼려한다. 기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2013년에는 적어도 재정적 불확실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는 더욱 높아지고 경제회복도 활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